

# “우라도 등록금 반환 대상” 이유있는 대학원생 목소리

등록금 반환요구, 학부생 중심 논의 대학원생 정원도 적어 의견개진 난항 “강의 질 떨어지는 상황 마찬가지”

대학 학부생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원생 사이에서도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도 반환 대상에서 대학원생은 제외된 상태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최 요청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생과 학교 간 등록금 반환 논의가 예정되면서 대학원도 반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학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시

부뿐 아니라 대학원 역시도 등록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최 요청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다.

연세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도 최근 1차 의견문을 통해 대학본부에 등록금 반환 요구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학생 대표자가 포함된 등록금 재정책 논의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다. 연세대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는 3월 말부터 교내 대학원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등록금 반환 요구는 주로 학부생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대학원생의 등록금 반환 여부는 수면 위에 오르지 못했다. 대학원생은 정원이 많지 않아

총학생회 자체가 없는 대학이 많아 학생들의 의견 등 목소리를 모으는 게 비교적 어렵기 때문이다.

연세대 한 대학원생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던 대학원 강의가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앱으로 이뤄지다 보니 질문이나 토론 등이 매끄럽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원격강의로 단순 지식전달에 그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 강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은 학부나 대학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반환 대상을 대학원까지 넓히는 데는 미온적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지원금 배당 여부를 ‘대학 자구 노력’에 기반해 가르기로 했지만, 환급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포함한다는 조건은 지금까지 거론된 바 없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반환성 특별 장학금과 2학기 등록금 삭감을 확정된 건국대도 환급 대상에 대학원생은 포함하지 않았다.

건국대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에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 논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도 “대학생까지 지원하면 대학원생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등의 우려 사항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교육당국은 대학이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환급·감면하면 해당 학교를 간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대학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달 27일까지 모집한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에 대학과 대학원생 373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건국대, 등록금 반환 실현... 44억 '특별장학' 편성

2학기 등록금 중 일부 감면 방식 총액 기준 8.3% 반환 효과 계획

건국대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대표와 '교학소통위원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 총 44억원의 '특별장학'을 편성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전체 재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주요 대학 중 학생과 합의를 거쳐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을 실현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총 44억원의 '특별장학'을 편성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전체 재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건국대는 특별장학의 취지에 맞게 전액 국가장학 학생 등 사각지대가



건국대학교 정경

없도록 전체 등록 재학생에게 일괄 10만원 씩 학업장려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계열별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기준 일정 비율로 등록금성 장학금을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거나 계좌 이체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총액 기준 8.3%의 감면 또는 반환 효과가 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금성 장학금의 2학기 고지서 감면이나 1학기 계좌이체 등의 방법은 학

생이 각자 선택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총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의 경우 36만원 ▲수의학계열의 경우 39만원의 특별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계열별 8.3%의 등록금 감면 또는 반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학 총액 44억원은 한 학기 수업료 총액 500억원의 8.9%에 해당한다.

건국대 추산에 따르면 5000여명의 학생은 35만원 이상~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148명(외국인유학생 포함)은 최대 4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충주 글로벌캠퍼스도 같은 방식으로 19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체 재학생에게 계열별 등록금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방산비리 비호하는 이상한 軍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대한민국 군대는 피아식별도 못한다. 누가 자기들을 도울 존재인지 해할 존재인지를 모른다. 시민들이 준 세금으로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옹호하고, 이들을 막으려고 나서는 자들을 쥐는 군대가 정상인가. 지난 2016년 4월 국방조달시스템을 들여다 보다 베일에 싸여있던 183억 규모의 심리전 대북확성기 사업 내용이 딱히 펼쳐져 있었다. 당시 대북확성기 운용 단독보도와 함께 올린 기사가 있다. '대북확성기 비리의혹'이었다.

대북확성기 배치는 빠르게 퍼져 나갔지만, 대북확성기 비리의혹은 군당국의 몰타기 기사로 오랫동안 묻혀버렸다. 해군 소령으로 복무 중 용기있게 내부고발을 했던 김영수 국방원인연구소장(2016년 당시)이 비리의혹을 현미경처럼 파고들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4년 간 대북확성기 비리를 추적하면서 시장조사가격과 다른 납품가 부풀리기, 성능미달, 성능평가 기간 연장 등 위법한 정황을 던질 때마다 국방부와 국방부 예하 국군심리전단은 업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2016년 10월 4일 국방부대변인실 입회 하에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에게 “대북확성기의 성능평가 문제는 계약특수조건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16년 4월 긴급공고로 공지된

'대북확성기 사업입찰 제안요청서 제2호 마항'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사업 낙찰 업체는 2016년 7월 중으로 성능평가를 완료 후 11월말 까지 납품을 완료해야 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납품기간을 연장 해주면서 또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2월말 대법원은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에게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등 대북확성기입찰과정의 특혜, 부실성능검사, 납기일 연장의 의혹이 사실상 밝혀진 것이다.

군 당국은 부정당행위로 낭비된 시민의 돈을 당연히 환수 받아야 한다. 지난 1월말 본지는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 질의를 넣었지만 국방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국방부는 부당이익 환수보다 다른 주머니에 관심을 뒀던 것 같다. 비리로 인한 국고 손실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공익 신고한 제보자인 김 소장을 '군사기밀 누설'이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한 것이다.

그는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방부 심리전단장과 국방부 법무관관관을 상대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을 도우려는 그에게 군 당국은 조준선을 돌린 것이다. 결국 김 소장은 지난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피아구별도 못하는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 비리라는 소나비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이 여름철 장맛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captinm@

## 교비로 '황금열쇠'... 법카로 '해외여행·경조사비'

### 교육부, 세종대 종합감사서 무더기 비리 적발

회계연도 수익률 0.38~0.68%에 그쳐 법정 최저 수익기준에도 부족한 수준

세종대가 퇴직 직원들에게 교비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황금열쇠'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인 대양학원 한 직원은 해외에서 호텔 숙박비 결제 시 학교 법인카드를 쓰거나 업무 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낸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세종대 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부실하게 관리해왔다고도 지적했지만, 세종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세종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재산 부실 관리 등 4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양학원 한 임원은 150차례에 걸쳐 경조사비로 1975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2016년 3월 개인적인 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도쿄 소재 호텔에서 법인카드도 49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8년 11월까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만 617만원에 달한다.

세종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 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과 함께 교비로 순금 10돈 상당(구입 금액 250만원)의 황금열쇠를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장학금지급에서도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대는 학생 28명에게 지급한 학생지원비 1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처리했다. 봉사장학생 장학금지급에서는 미자격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총 131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세종대가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연도 수익률이 0.38~0.68%에 그쳐 법정 최저 수익기준(연도별 1.56~2.73%)

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대해 세종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하에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지만, 1657억원은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성과라는 것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등 합계 9억원을 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고 반박했다.

/이현진 기자